

고려 혹은 대한조선: 통일국가의 명칭에 관하여*

김 병 로**

- I. 서론
- II. 남과 북의 통일방안에서 제안된 국호
- III. 국호 논쟁의 역사적 배경
- IV. 한국과 조선의 민족 정체성 경쟁
- V. 대한조선: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 논문은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치열한 갈등이 예상되는 국호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통일국가의 명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의 통일논의에서는 북한이 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로 제안한데 반해 남한은 구체적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탈냉전 초기에는 남북 어느 한쪽을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국호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일국가의 명칭을 제3의 대안인 고려로 제안하는 방식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지난 75년 동안 남북한은 자기체제 중심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구성원들의 의식구조가 확연히 달

라졌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향상된 것을 감안하면 통일국가의 국호로 대한민국을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달라진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자산을 활용하고 동시에 조선을 통합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조선을 아우르는 대한조선을 통일국호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제어: 국호, 통일국가명칭, 고려, 대한민국, 한국, 조선, 대한조선, 민족정체성

*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0-361-A00017).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I. 서론

통일문제는 남북대화와 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 회담과 공동선언문에서 통일의 원칙과 정신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을 이룩하자는 의지와 열망을 표명해 왔다.

그런데 통일관련 논의에서 이러한 원칙과 정신의 천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민감하고 중대한 주제는 그러한 원칙과 정신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하느냐라는 통일방식과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국호의 문제일 것이다.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에 관한 초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통일국가의 명칭에 관하여서는 남북 간에 아직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 오히려 남북대화에서는 나라의 공식이름을 호명하는 것조차 꺼려하여 남과 북으로 호칭하기로 합의한 이래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호의 호칭을 금기시하고 있다. 남북의 공식 합의문서에는 상호 국명을 명기하고 있으나 대화의 장에서는 공식 호칭 사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국제적으로 두 국가로 오해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배려를 하자는 입장에서 남북이 두 국명의 공식화를 자제하고 있다고 하나,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민감한 정치적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호는 국가정체성을 담고 있는 나라의 이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에는 민족정체성을 규정하는 ‘대한’(大韓)이, 정치체제의 성격 또는 국가(state) 정체성을 규정하는 ‘민국’(民國)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민족정체성을 규정하는 ‘조선’과 정체 및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과 조선은 국호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우리말의 민족은 영어의 ethnic group과 nation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The ethnic(민족)은 언어와 지역, (혈통), 역사, 경제를 공통적으로 갖는 실체이며, nation(민족, 국민)은 근대 정치체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동체 의식을 갖는 집단을 가리킨다. 남과 북에서 민족의식이 각자의 역사와 전통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민족감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식을 가진 민족(국가)공동체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민족감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대한과 조선의 민족공동체는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 즉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정치의식을 지닌 민족(국가)공동체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자고 하면 구체적으로 국호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대한과 조선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함의하는 국호의 결정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코리아의 경우 국호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나라를 호명하는 우리말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어로는 한국이나 조선이 Korea라는 국명을 공유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말 국명은 한국과 조선으로 달라 문제가 생긴다. 독일의 경우에는 도이칠란트(Deutschland)라는 독일어를 동독과 서독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았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여 정체를 포기하면 민족정체성을 규정하는 도이칠란트는 동독과 서독이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리아의 경우에는 남과 북이 한국과 조선이라는 다른 국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이 변하여 북한이 사회주의 정체를 담은 인민공화국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국호 안에 들어 있는 조선이라는 민족정체성까지 버리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코리아의 경우에는 통일과정에서 국호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가 된다.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담고 있는 국호는 통일논의에서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과 한국의 민족정통성 투쟁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남과 북이 자민족 중심의 역사해석과 또 정치적·이념적 의식과 결합되어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국가의 국호와 관련하여 민족정체성의 분열과 대립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통일 준비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치열한 갈등이 예상되는 국호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통일국가의 명칭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체로서의 민국이나 인민공화국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민족정체성을 규정하는 한국과 조선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물론 한국과 조선의 국호에 정치적 성격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민주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과 같은 정체성의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주제로, 본 논문은 한국과 조선의 민족정체성 관련 주제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남)과 조선(북)의 국호통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조선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의 통일방안에서 논의된 국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남과 북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의 국호를 제안해 본다.

II. 남과 북의 통일방안에서 제안된 국호

1.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서 제안된 국호

남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한 이후 통일방안이나 단체이름에서 한(韓)이라는 명칭을 줄곧 사용하였다. 이승만 정부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 통일방안을 제안할 당시 통일국가의 명칭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한민국이 자유선거에 의해 수립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를 하고 있던 터라 자유총선거에 입각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해도 국호는 대한민국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재야세력과 학생운동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드러내는 한(韓)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혁신계 재야세력이 발표한 통일방안을 보면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고 연합기구로 ‘한’을 전제로 한 ‘전한(全韓)위원회’로 제안하였다.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에서도 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외세와 결탁한 반혁명세력을 제거하며 민족자주세력의 총집결을 강조하면서도 ‘남북한’의 문화교류와 서신왕래, 경제교류 및 학생회담 추진을 제안한 데서, 남북의 구성원을 한(韓)으로 호명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내적으로 더 많은 경우에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호칭보다는 지리적 개념인 ‘남북’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남북정권기관’, 남북학생회담, 남북교류협력기구 등 주로 남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남북학생회담’ 등 남북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서술형 문장에서는 ‘남조선’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즉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 학생대표들을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것이며...” 등에 잘 나타나듯 조선이라는 호칭을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

장면정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멀공’을 표방하며 북의 ‘남북연방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며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정치적 이념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국호에 대한 언급은 없었

¹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서울: 박영사, 1997), p. 108.

다. 박정희 정부도 통일국호로 특별히 제안한 것은 없으나, ‘선건설 후통일’, ‘실력 배양을 통한 승공통일론’을 내세워 대한민국과 한국의 호칭을 줄곧 사용하였다.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25주년 경축사를 통해 통일의 걸림돌이 “민족반역집단이 북한 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남북조절위원회와 6.23선언에서는 한국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남북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남과 북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일치점을 보았다”라며 ‘쌍방’, ‘남북적십자’, ‘남북 사이’, ‘조국통일원칙’, ‘남북조절위원회’, ‘온 겨레’, ‘온 민족’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민족정체성 문제를 비껴나갔다. 남과 북을 대표한 인물에 대해서도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로 표기하며 상호 국명을 표기하지 않았다.²

전두환 정부 역시 통일국호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남북한, 북한 등의 표현으로 일관하였다. 1981년 1월 1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이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라고 하여 ‘남북한’, ‘북한’으로 남북을 호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1.22.)에서도 ‘민족통일협의회’ 구성과 통일헌법, 총선거, 통일국회, 통일정부구성 등 통일의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통일국가의 명칭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다. 7.7선언에서는 ‘북한’, ‘북한측’ 등의 표현을 담고 있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드디어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용한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韓민족인지 불분명하다. 이 통일방안이 통용되던 당시에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韓민족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미로 한민족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통일방안을 고안했던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원래 민족공동체라는 명칭을 선호했으나 “당시 냉전과 반공의 사회분위기에서 대한민국 주도적 역할을 표방하기 위해 ‘한’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³ 북한과의 대결적 상황에서 한국의 주도성을 대내외에 드러낼 수 있는 韓민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²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통일노력 60년』 (서울: 통일부, 2005), p. 102.

³ 위의 책, p. 210.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1994년 8월 15일 8.15경축사를 통해 ‘한민족’의 ‘한’자를 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려·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남한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를 뺄 수” 있었던 것이다.⁴ 그러나 공식적으로 삭제하는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게 따를 것이어서 공식명칭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수정하였으나, 약칭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자연스럽게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규정되었고, 김대중 정부로부터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국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남한(한국)은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이 통일국가의 명칭에 대해 제안하지 않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나, 추론컨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대한민국이 현재 갖는 세계적 위상과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에도 당연히 ‘대한’을 국호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봐도 제3의 국호를 대안으로 제시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상실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어서 자칫 국내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통일국가의 호칭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에서 제안된 국호

북한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통일국가의 국호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4년 4월 27일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 표기하면서도 ‘전조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⁵ 남과 북을 아우르는 민족을 조선으로 호명한 것이다. 이후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김일성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면서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혹은 민족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남북연방제’로 제안하였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선과 한국을 드러내지 않고 지리적 개념인 남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 남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워낙 남쪽에서 한(韓)을 강조하고 있던 터라 선불리 국호문제로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⁴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통일노력 60년』, p. 210.

⁵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p. 18.

묻어낸다. 그러나 그 제안 안의 서술방식을 보면 통일국가가 조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남조선 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기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제안한다”는 문장에서 우리민족 전체를 조선으로 아울러 호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

북한의 사회단체와 학생회담에서도 통일기구의 명칭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61년 5월 13일 결성대회에서 조평통은 “남북 간의 접촉화 협상은 남북조선의 정부당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 간에도 필요하며, 정당, 사회단체, 실업계, 교육, 문화예술, 체육계와 혹은 개별인사들 간에도 절실히 요구된다.”(제2항)라고 하여 조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⁷ 남북학생회담에서도 북측의 학생단체가 남측에 보낸 서한에서 ‘남조선’으로 호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이 통일방안에서 국호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남북회담을 위해 남측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던 1972년 5월 3일의 일이다. 당시 북측 대표단은 “련방국가의 국호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고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⁸ 통일국가의 명칭과 관련하여 북측이 언급한 최초의 발언이었다. 이후 1973년 6월 23일 북측이 ‘조국통일 5대강령’에서 단일국호의 남북연방제를 실시(4항)하고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5항)을 제안하였다. 4항에서 국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쌍방에 다 같이 접수될 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 것입니다.⁹

⁶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pp. 46~47.

⁷ 위의 책, p. 115. ‘북남불가침조약체결’ 제의 및 ‘북남경제위원회’ 설치 제의(1963.12.9.),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유관국회의 소집’ 제의(65.7.21), ‘북남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 연석회의 소집’ 제의(66.7.8),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남북연방제’ 실시 및 ‘북남평화협정’ 체결 제의, ‘외세 간섭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남북조선총선거 실시로 통일실현’(69.10.8) 등에서 보면 조선을 전제로 제안한 것을 볼 수 있다.

⁸ 김일성,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정상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들과 한 담화, 1972.5.3., 11.3)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91. 북한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때에는 북남련방제라 하지 않고 ‘남북련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다.

⁹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6.25.),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91; 김일성,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이나 북측이 사용하고 있는 조선의 어느 한쪽으로 통일국호로 제안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측은 “만일 련방국가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측의 주장을 다른측에 강요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등한 원칙에서 쌍방이 다 접수할 수 있도록 련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련방공화국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라며 배경 설명을 하였다.¹⁰

1980년 10월 10일 북측은 조선로동당 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국호와 관련하여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이 공동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고려라는 국호를 재차 제안하였다.¹¹ 이후 최근까지 북한은 통일국호에 대한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로 제안한 이유는 고려가 최초의 통일국가라는 점 때문이다. 고려를 통일국호로 쓰자는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영어명칭 Korea(코리아)가 고려에서 연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양 사람들은 고려를 Coreia(코레아)라고 불렀다. 이 영어명칭 Coreia를 일본이 조선강점시기에 Korea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영어명칭 Japan이 알파벳 순서로 Coreia보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본을 조선(한국)보다 앞으로 배열하기 위해서였다.¹²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남북의 통일논의에서 북측이 제안한 고려(高麗) 외에 통일국가의 명칭에 관하여는 아직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남북의 회담에서는 공식 국명을 부르지 않고 남과 북 혹은 남측, 북측 등 지리적 명칭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행사에 단일국호로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자

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3.6.25.), 『김일성저작집 2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401.

¹⁰ 김일성, “일본 《이와나미》 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과 한 담화,” (1973.9.19.), 『김일성저작집 2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12.

¹¹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80.10.10.), 『김일성저작집 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47.

¹²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안경상 실장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영문표기 COREA를 JAPAN보다 앞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알파벳 C를 K로 바꿨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국호 영문표기 시정 남북공조 주장,” 『연합뉴스』, 2003.1.20. <<https://news.v.daum.net/v/20030120052502857?f=o>> (검색일:2020.2.7.)

리에서는 남과 북을 아울러 부르는 국호로 영문국명인 코리아(Korea)로 통칭하며, 국가는 아리랑으로, 국기는 한반도기를 대신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Ⅲ. 국호 논쟁의 역사적 배경

1. 조선(朝鮮)에서 대한(大韓)으로 - 청으로부터 자주와 근대화 열망

대한민국 국호의 연원은 대한제국에서 시작된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황제로 등극하고 다음날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선포하였다.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단군과 기자 이래로 강토가 나뉘어 각각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서로 융합을 다투다가 고려에 이르러 마한, 진한, 변한을 탄병하였으니 이것이 삼한(三韓)을 통합함이다. 우리 태조께서 융흥하는 처음에 여도로써 밖으로 개척한 땅이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의 계를 다함에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국을 건움에 굴과 풍부한 여러 해산물을 공하는지라....금년(1897) 9월 17일에 백악의 남에서 천지에 제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호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¹³

고종은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지금 천하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찍이 각국의 문자를 볼 때마다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韓)이라고 했으니, 이는 아마 미리 징험을 보이고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천하에 성명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천하는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였다.¹⁴

고종이 굳이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려고 한 데에는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가 이성계가 명나라 황제에게 받은 것으로 굴욕적이라 보았다.¹⁵ 대한제국 초대 의정대신인 심순택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철

¹³ 『고종실록』 36권(광무 원년 10월 12일조); 윤병석, 『대한과 조선의 위상: 격동과 시련의 조선말, 대한제국, 대한민국시대』 (서울: 선인, 2011), p. 24에서 재인용.

¹⁴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p. 101.

¹⁵ 박광용, “우리나라 이름에 담긴 역사계승의식-한·조선·고려관,” 『역사비평』 계간 21호 (1993년 여름), p. 19. 조선과 자기 고향 이름 화령 중에 국호를 정해달라는 이성계의 요청에 명의 황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정해주었다. 화령은 조선시대에 영흥으로 불리던 지역이며, 1952년 12월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함경남도 금야군으로 변경되었다.

저하게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에서 나온 조선이라는 국호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⁶ 19세기말 근대적인 세계질서 속에서 자주국가로 새 출발하려는 조선왕조에 가장 큰 문제는 오랫동안 종주국으로 인식되던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대한’으로의 국호변경은 중국으로부터 종속된 채 오랜 세월 나라를 통치해 온 조선이 풍전등화의 운명 앞에 나라를 중국이나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된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추진해보려는 고종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한’은 조선왕조가 서구 중심의 근대 세계로 진입하면서 만들어낸 근대 국가의 코드였다.¹⁷

2. 임시정부-항일독립 표상의 ‘대한’(大韓)과 조선공화국과의 분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의지를 표방하기 위해 대한이라는 국호를 견지하였다. 임시정부가 국호를 대한으로 사용한 것은 일제가 대한을 말살하고 조선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데 대한 반발의식이 컸다. 일제의 조선반도 병합 이후 일본총독부는 대한제국 대신 조선을 국호로 사용하도록 강제하였기 때문이다.¹⁸ 조소앙은 “우리가 대한이라는 용어에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는 까닭은 한이란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문자인 까닭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면 명백하거나와 자주독립의 기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본이 고의로 말살한 한이란 글자를 우리는 지켜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¹⁹ 이런 점에서 대한이라는 국호는 대한제국 시기 정부의 근대화 추진과 민간의 애국계몽운동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일제의 탄압에 맞서 자주독립정신을 표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1923년 국민대표대회 이후 ‘대한’을 주장하는 세력과 ‘조선’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개조파와 임

¹⁶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pp. 103~104.

¹⁷ 강응천, 『국호로 보는 분단의 역사』 (서울: 동녘, 2019), pp. 156~159.

¹⁸ 이완범, “국호 ‘대한민국’의 명명,” 『황해문화』, 제60호 (2008), p. 60. 일본 초대 총독 데라우치의 총독부 시무식 훈사에서 그는 “이 땅의 판도는 오늘부터 대한제국이 아니라 조선이라 부른다. 한성은 경성이라 한다. 저들보다 조선보다 대한제국에 미련이 남아 있고 경성보다 한성에 연연하여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기보다 한민족이기를 원하지만 나를 믿고 지시대로 봉공하라.”라고 명령했다. 이에 순종은 칙령(318호)으로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¹⁹ 조소앙, 여운형 등은 초기에 대한의 국호사용을 반대하였으나 나중에는 항일독립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였다. 조소앙, “임시정부의 성격,”(1945.12.7.). 삼균학회 편, 『소앙선생문집(하)』 (서울: 횃불사, 1979), p. 55; 황태연, 『대한민국 국호의 역사적 유래와 민국의 의의』 (서울: 청계, 2016), pp. 54~56에서 재인용.

정을 부정하는 창조파가 대립하였다. 국민대표대회 결렬 후 창조파들은 1923년 조선공화국을 결성하였다. 당시 공산계열 단체들 중에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지는 입장이었으나, 공산계열 중 젊은층이 다수를 이루었던 전로공산당 이르쿠츠크파는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탈퇴하였다. 1923년 6월 2일 윤해(尹海)를 의장으로, 신숙(申肅)을 부의장으로 하여 정부를 세우기 위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국무위원으로는 김규식, 지청천, 최동오, 여운형 등 30인을 선출하여 국무위원회를 구성, 국호를 ‘조선공화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였다.²⁰

김구는 이를 모반행위로 규정하여 국민대표대회를 즉시 해산시켰다. 임시정부와 완전히 결별한 것이다. 조선공화국 임원단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하였으나 소련정부에 의해 추방되어 각지로 흩어졌다. 이들은 북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였다. “민족주의자들 중 완고하고 반동적인 층은 중국 상해에 모여 이른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민대중과 유리되어 있는 망명집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중적 반일투쟁의 실제적 과정에 이렇다 할 작용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비판을 받은 것이다.²¹ 또 “행세식 맑스주의자들도 고질화된 종파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파벌싸움을 계속 일삼고 있었다”고 하면서 혁명투쟁을 하지 않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다니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한다.²² 오로지 김일성 중심의 공산주의자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대한과 조선으로 국호사용이 나뉘진 이후 이념적 분열은 국호를 둘러싼 좌우대결로 표출되었다. 1935년 조선의열단,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 등은 좌우합작으로 민족혁명당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통합정당의 명칭을 두고 격렬한 대립을 노정했다. 격렬한 논쟁에서 통합명칭을 민족혁명당으로, 대외명칭을 한국민족혁명당으로, 반도의 내부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하는 타협책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좌파세력은 민족혁명당을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칭했고, 이로써 좌우합작은 붕괴되었다.²³ 국호를 둘러싼 항일시기의 이런 고착된 좌우대결의 전통 속에서 해방 후 남한은

²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1925>> (검색일: 2019.3.21.).

²¹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6.

²²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5.

²³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pp. 164~164. 민족계열 독립운동 세력이 대한을 국호로 사용함에 비해, 좌익 독립운동 세력은 고려공산당(1921), 조선공산당(1925), 고려공산청년회, 조선의열단(1919),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화북조선청년회 등으로 고려나 조선을 국호로 사용하였다. 윤병석, 『대한과 조선의 위상』 (서울: 선인 2011), pp. 32~35.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한 반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택하는 흐름이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다.

3. 한국-조선 정부 수립과 국호 대립

국호의 논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헌법초안을 제정하는 시기에 재점화되었다. 헌법초안인 조선임시약헌에는 “조선은 민주공화정체임”(제1조), “조선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함”(제2조)으로 조선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1947년 7월 16일 열린 제2독회에서 원세훈 의원이 ‘조선’이라는 국호사용을 반대하며 대한이나 한국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국호는 정식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하자, 윤기섭 부의장 등은 조선은 국호가 아니라 법안의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국호가 정해지면 자연히 고치는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조선임시약헌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보듯 당시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보다는 조선이 일반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당시 국호의 선호도를 보면 대한민국보다 조선인민공화국이 대중들의 인기를 훨씬 많이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7년 7월 3일 조선신문 기자회가 서울 시내 2,49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임시정부 국호에 관한 선호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응답은 약 24%,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응답은 약 70% 정도였다.²⁴ 대한제국의 존립 기간이 짧았고 의식 있는 지도층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국호여서 일반 민중에게는 낯선 이름이었다. 반면 조선은 500여 년간 우리나라 국호였고 수천년 동안 한반도 일대의 고유 칭호로 쓰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친숙했다.²⁵

대체로 당시 우익계열은 대한을, 좌익은 조선을, 중도파는 고려를 선호하였다.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통일전선이었던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 중도파가 주도한 시국대책협의회는 고려공화국을 각각 제안했다. 설의식, 손진태와 같이 지식인층에서는 대한이나 조선보다는 새한, 고려 등의 제3의 대안을 제시하였다.²⁶ 이로부터 항간에는 국호와 관련하여 우익=대한, 좌익=조선,

²⁴ 『朝鮮日報』, 1947.7.6.; 강응천, 『국호로 보는 분단의 역사』, p. 101에서 재인용.

²⁵ 강응천, 『국호로 보는 분단의 역사』, p. 21.

²⁶ 당시 설의식 같은 사람은 ‘신국가의 국호론’에서 대한과 조선, 고려가 왜 국호로 적합한가에 대한 논거를 비판적으로 요약 설명하면서 대안적 국호로 새한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를

중간과=고려라는 등식이 성립했고 ‘좌조선 우대한’이란 용어가 널리 회자되었다.

치열한 논의 끝에 1948년 6월 3일 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국호에 관한 표결에서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안을 헌법초안으로 확정하였다.²⁷ 압도적 다수로 대한민국이 국호로 채택되었고 조선은 소수의견으로 존재하였다. 대한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은 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했던 국호가 대한이므로 이 역사성을 잘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줄곧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데 영향을 받았다. 이승만은 자신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 생각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자연스럽게 강조하였으며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도 줄곧 그런 입장을 견지하였다.²⁸

이후 이승만 정부는 북한에 조선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남북의 두 정부가 민족정통성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국호가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여 조선이라는 국호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1950년 1월 이승만 정부는 국무원 고시 제7호로 ‘국호 및 일부 지명과 지도 색 사용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는데, 대한민국 또는 약칭인 한국을 국호로 사용하되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지도의 색깔도 녹색으로 하고 붉은 색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²⁹ 탈냉전 이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적용 등으로 조선의 용어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어졌으나 관행과 규범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조선을 국호로 정하는데 특별한 논쟁이나 문제가 없었다. 김두봉은 1948년 4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1948년 4월 28-29일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³⁰ 북한 헌법은 국호와 관련 제1조에서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주장한 사학자 손진태는 1947년 12월 16일 ‘서울신문’에 “국호와 민족적 전통-조선, 한, 고려 등에 대하여”라는 글을 실었다.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pp. 64, 72, 76.

²⁷ 이완범, “국호 ‘대한민국’의 명명,” p. 69.

²⁸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pp. 20~26.

²⁹ 김명섭, “조선과 한국: 두 지정학적 관념의 연속과 분화,”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 (2016), 129;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p. 44.

³⁰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p. 50.

화국이다”라는 규정을 놓고 조선이라는 명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미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 만들어진 정당, 사회단체, 행정기구가 대부분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호를 명문화하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인민 같은 정체를 규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조선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논란이 전혀 없었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남북 이념대립 구조에서 대한민국을 정부의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력사사전』에도 ‘남조선 괴뢰정권’으로 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치게 되자 낮은 식민지통치방법으로써는 저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할수 없다는 것을 타산하고 제놈들의 흉악한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기에 미쳐 날뛰었다....이것은 결국 《미군정청》의 간판을 소위 《대한민국정부》로 바꾸어 단 것이다”³¹라며 미군이 앞잡이로 세운 ‘괴뢰정권’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³²

북한의 이러한 비판은 인민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정체와 관련한 비판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대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식하는 발언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며 우리민족과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호라 생각한 것 같다. 북한의 상황에서 ‘대한’의 사용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대한민국이나 한국정부에 관한 호명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병렬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³¹ 사회과학출판사, 『력사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415.

³² “《대한민국정부》는 철두철미 미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괴뢰정부로서 조작된 이래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였으며 공공연히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아왔다.” 김일성,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한 보고, 1949. 6.11.),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07; “남조선의 소위 《대한민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 “현재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54;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는 결코 남조선인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이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돛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8년 9월 7일), 『김일성 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73.

IV. 한국과 조선의 민족 정통성 경쟁

1. 남과 북의 상호배제와 자국중심적 역사해석

1948년 남과 북의 정부 수립과정에서는 한국과 조선이 단순한 민족정체성만이 아니라 국가정체성과 정통성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더 복잡해졌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종의 제국 주장이나 임시정부의 민국 천명이 정치적 성격을 담고 있어서 조선과 대한을 순수하게 민족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남과 북에 조선과 한국이라는 민족정체성을 지닌 정부가 등장하면서 뚜렷하게 앞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특성이 더 강하게 내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분단 초기만 해도 북한은 민족보다 사회주의와 이념을 중시하여 민족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별로 하지 않았으며 냉전시기 동안 줄곧 민족에 대한 관심을 그다지 표명하지 않았다. 민족은 실질적 내용보다는 사회주의 사실을 담는 그릇으로서 형식과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민족보다는 계급을 강조하였고 국가는 통일과 관련하여 ‘조국통일’로 바라보았다. 우리민족을 조선민족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선민족으로 부르든 고려민족으로 부르든 별 상관이 없었다. 민족정통성이나 역사적 정통성을 부각하는 의미에서의 조선은 강조되지 않았고 조선공산당이나 조선인민혁명 등 사회주의 이념적 맥락에서 조선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남한에서는 새로운 민족정체성으로 ‘대한’을 매우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오랜 왕조 역사와 단절하며 형성한 대한제국의 전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정통성을 지닌 정부로서 민족과 국가정체성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분단 초기 ‘대한’ 의식은 주로 지식인들과 엘리트 사이에서 강조되거나 공유된 의식이였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대한’은 일반대중들에게는 조선보다 친숙한 국호는 아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한’의 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승만 정권에서 강조한 대한민국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였던 때문인지, 아니면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조선왕조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대한으로 국호를 변경한 고종의 근대적 비전과 자주 의식, 일제로부터 독립의식을 가진 지식인과 학생들이 선진적 사유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크다.³³

남과 북은 한국과 조선의 정부 수립 이후 법제도 마련으로 자국의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고, 상대측 국호는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규범이 형성되어 점차 비대칭적 국호로 굳어졌다. 초기에는 특히 상대 국호에 대해 ‘괴뢰정부’, ‘꼭두각시’ 등의 비난으로 일관하였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남과 북은 조선과 한국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미제식민지로 각인시켰고, 남한은 북한을 공산당 괴뢰도당이라며 조선을 공산당과 연결시키며 배제하였다. 조선왕조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만 조선을 표기하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관련된 북한을 지칭하는 조선의 표현은 금기시 하였다.

상이한 이념체제의 분단이라는 당시 상황에서 이념분단이 심각한 문제여서 민족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침해하게 부상하지 않았다. 이념으로 분단된 국가정체성의 분리가 워낙 크고 민감하였기 때문에 조선과 한국의 정체성 자체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이념적, 정치적 차이가 너무 심각하였던 상황이라, 우리민족을 한국으로 호명하든, 조선으로 호명하든 그것은 그리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냉전시기에는 우리민족이 조선민족으로 불리든, 한민족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체제경쟁으로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내는 것이 지상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에서 진행된 역사해석은 민족정체성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한국과 조선으로 분단된 이후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 한국과 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리민족의 근원을 한민족으로 규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신라 중심의 역사를 전개하였다. 한국은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한’이 삼한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후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에 대한 강조와 삼한정통론 같은 역사해석에 의존하였다. 고조선의 정통성이 남쪽으로 건너와 세운 마한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삼한정통론은 이런 점에서 남한이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자원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규정하고 삼한과 신라통일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냉전시기에는 남과 북의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었던 터라 남한에서는 삼한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신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신라는 한반도에서

³³ 학생들은 “이조(李朝)와 일제통치(日帝統治)로부터의 유산인 사회구조의 식민지적·반(半)식민지적, 반(半)봉건성의 요소는 8.15해방 후 정부 수립 이래 금일에 이르러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대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pp. 70~71.

최초의 통일국가로 간주되었다. 고구려, 발해와 같이 북쪽지역에 거주했던 우리민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탈냉전 이후에는 그에 대한 반성으로 고구려와 발해 등 우리나라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구려보다는 신라의 역사가 민족정체성을 규명하는 자원으로 많이 동원되었다.

반면, 북한은 우리민족의 근원을 조선민족으로 규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고구려 중심의 역사를 전개해 왔다. “고조선의 원래의 국호는 《조선》인데 후세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옛날의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고조선》이라고 불러왔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 의하면 기원전 24세기에 《단군왕검》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며 단군이 세운 조선에서 민족정체성을 찾는다.³⁴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부여와 발해 등 북쪽 민족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러다보니 부여를 구성한 예족이나 맥족을 우리민족의 주류로 해석한다. 부여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길림시 부근에 있었고 부여가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전 그 지역에 거주했던 부족들 가운데는 ‘예’국이 고대 초기 소국으로 존재했다고 한다. 반면 진국은 고대조선족의 한 갈래인 삼한(마한, 진한, 변한) 사람들이 중부조선 이남지역에서 세운 나라로 본다.³⁵

2. 조선민족주의와 한국민족주의의 분화·발전

탈냉전 이후에는 북한이 오히려 민족을 앞세우며 민족통일을 강조하는 반면, 남한은 민족이란 용어사용을 꺼리며 민족통일보다 남북통일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북한(조선)은 냉전시기 민족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았다가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던 1980년대 말 민족을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민족의 시조로 단군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단군릉을 조성했는가 하면,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업적을 부각하는 왕릉개건 사업을 추진하였다.³⁶ 북한이 최초의 통일국가로 고려를 내세우며 강조하고 있어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국가프로젝트 일환으로 왕건릉 개건사업을 추진하였다.³⁷

³⁴ 손영중·박영해·김용간, 『조선통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p. 36.

³⁵ 위의 책, pp. 40~43. 구려국은 압록강 중류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고구려에 앞서 존재한 고대국가였다. 구려국의 중심지는 환인 부근이었다.

³⁶ 김일성, “구월산을 피서지로 꾸리며 고려태조왕릉을 개건할데 대하여,” (구월산 피서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사판과 고려태조왕릉 형성안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1993.1.15.)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52~55.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 고려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려민족제일주의를 사용하고,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조선민족제일주의 대신 고려민족제일주의를 부각시켰다. 통일과 관련하여 조선보다 고려를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남과 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조선보다는 고려와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인민들 속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고려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야 그들이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도 고려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최근 년간에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 수령님의 품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이것은 그들이 해외에서 오래동안 살고 있지만 심장 속에는 고려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³⁸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회주의 제도나 주체사상 관련 보다는 역사적 전통으로서의 민족으로 진전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강조하고 1992년 개성을 방문하여 고려성균관을 경공업종합대학으로 확장하였고, 왕건왕릉도 개건하였다. 특히 단군릉을 개건하여 단군이 평양을 수도로 하여 나라를 건설했다며 단군과 평양이 우리민족의 첫 발상지였음을 상기하며 민족전통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민족의 사상정서와 생활,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 민족음악을 발전시켜 청년세대가 조선민족음악의 우수성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도 강조하였다.³⁹

북한이 강조하는 조선민족주의에는 우리민족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바탕 위에서 사회주의 정권과 제도, 주체사상 등 이념적, 계급적 해석이 융합되어

³⁷ 김일성은 개인적으로 왕건에 대한 평가는 동명왕보다 좀 낮게 평가한다. “나는 요즘 조선력사책을 보고 있는데 왕건을 력사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명왕과 같은 큰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건이 후삼국과 발해 남부지역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후삼국을 통합할 때 큰 전쟁을 한 것도 없고 자랑할만한 공로를 세운 것도 없습니다....결국 왕건이 고려라는 통일국가를 세운것은 동명왕처럼 친치개혁을 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후기신라와 후백제를 내란으로 다 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씩 하나씩 먹어버린 것을 보면 기회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구월산을 피서지로 꾸리며 고려태조왕릉을 개건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44』, pp. 53~54.

³⁸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2.4.)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0~16.

³⁹ 김정일,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11.13.)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372~373.

발전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해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등을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민족의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정치적으로 형성된 국민정체성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그럼에도 이데올로기의 응집력이 세계적으로 상실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제를 꼬집어내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생존전략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편, 한국의 민족정체성은 탈냉전 이후 급부상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민주적 정치변화를 이룩하면서 일약 세계적 발전모델로 떠올랐다. 자동차와 핸드폰 등 IT산업을 비롯하여 스포츠,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이른바 한류문화를 세계적 흐름으로 형성하며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생겨났다. 한류와 한민족에 대한 긍지는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한국이 세계4강에 오르는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과 융합하여 대한민국 중심의 민족주의를 새롭게 형성한 것이다.

돌아보면 냉전시기는 물론 1990년대까지도 우리사회에서 대한민국과 한국을 자긍심을 갖고 호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학계에서는 남한이라는 말로 한국을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하였을 것이다. 명실상부한 근대 민족국가로 발돋움하기에는 미흡한 결핍국가로서의 남한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완전한’ 국민국가 대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 구성원에 뚜렷하게 형성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시기일 것이다. 고종이 결단했던 ‘대한’의 기상과 임시정부의 독립정신,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탈냉전 문화발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확립된 것이다.

3. 조선과 한국의 국민국가 정체성

냉전시기 동안 한국과 조선의 국가성이 강화되었고 특히 1991년 9월 남과 북이 유엔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한 것은 상호배제에서 상호인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엔가입과 관련하여 두 개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영구분단을

⁴⁰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1.11.)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5~36.

가져온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두 나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달라졌다. 유엔은 독립 국가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 간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과 조선은 명실상부하게 국제무대에서 개별국가로 인정을 받게 된 셈이다. 남북관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두국가로 인정하기를 꺼려하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기본합의서조차도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며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한국과 조선의 국가성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탈냉전 이후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뀐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과 조선은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인 국가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각 구성원들 역시 대부분 자기체제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공통의 정서와 지향, 가치를 공유하는 개별 단위가 되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과 조선 의식으로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국과 조선은 더 이상 같은 나라라는 의식이 없다.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의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례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묻는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질문에 대해 61.2%가 ‘그렇다’고 답했고 29.6%는 ‘반반/그저그렇다’, 9.2%는 ‘아니다’로 답하였다. 한국인의 61%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반면 9%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 30%는 평가를 유보하였다.⁴¹ 대답의 의미는 북한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제는 유엔의 회원국으로 대한민국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독립된 나라라는 의식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구성원들은 한국과 조선이라는 자기체제와 국가가 강조하는 정치의식과 민족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2019년 7월 매우 자랑스럽다 19.4%, 다소 자랑스럽다 60.6%로 총 80.0%가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반대로 북한주민 또한 2018년 7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약간 가지고 있다 27.6%,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42.8%를 합하여 총 70.1%가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이러한 남북 구성원의 의식구조 속에도 한국과 조선의 자기국가와 체제에 대한 자

⁴¹ 김학재 외, 『2019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p. 92.

⁴² 위의 책, p. 465.

⁴³ 정동준 외, 『북한주민통일의식 2018』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p. 214.

부심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에서 국가성의 강화에 따라 국민국가(nation-state)에 관한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등장하여 공화국 조선에 대한 자긍심과 강조를 이어가고 있다. 남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조선과 한국은 민족정체성을 넘어 국가정체성으로 발전하고 있고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로서의 성격이 확연해지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공식회담에서 남측, 북측 등의 지리적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호명되고 있고 상대국 지도자의 공식 호칭을 부르고 있다는 점은 국가실체의 위상이 남북관계에서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국가의 명칭은 바로 이런 변화된 환경과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V. 대한조선: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코리아는 조선과 한국 사이에 끊임없는 민족정체성 논쟁을 전개해 왔다. 1897년 조선의 고종이 나라의 이름을 조선(朝鮮)에서 대한(大韓)제국으로 새로 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체성은 큰 변화를 이루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시까지 대한(大韓)의 정체성은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청년공산계열 창조파가 모여 1923년 조선공화국을 결성함으로써 대한(大韓)과 조선(朝鮮)의 정체성 논쟁은 점화되었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대한민국 국명이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었으나 조선의 국명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은 조선공화국 또는 조선인민혁명군 등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해 왔고 1948년 북쪽 정부 수립 시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남과 북에서 대한(大韓)과 조선(朝鮮)이 민족정체성 투쟁을 본격화하였다.

한국과 조선의 민족정체성이 아직 확고하지 않았던 냉전시기에는 국제적으로 냉전이테올로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터라 한국과 조선의 정체성 대결보다는 자본주의/공산주의 대립이 압도하여 민족정체성의 대립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체제 안으로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고구려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조선과 신라 중심으로 우리민족의 역사를 해석하는 한국으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정통성 확보를 두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보다 전면적으로 조선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단군릉을 개건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앞세워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뿌리가 조선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김일성을 필두로 김일성민족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으나, 김일성민족을 태양민족, 조선민족과 연결시키면서 조선의 정통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이름은 민족과 역사 정통성 문제를 수반한다. 통일 과정에서 한국과 조선은 각자의 업적과 역사해석을 통해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을 것이다. 조선(북한)의 국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하여 통일국가의 국호를 두고 사활을 건 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논의가 비록 선연적이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언급되었고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통일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 정치외교적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나면 통일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정통성 확립을 위한 국호논쟁이 뒤따를 것이다.

탈냉전 직후 1990년대에는 한국과 조선을 넘어서는 제3의 국호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고려가 유력하게 제시되었다. 국호는 쌍방 간의 합의가 추구되어야 하며 한쪽을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국호는 기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일국가의 명칭을 고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⁴⁴ 탈냉전 초기에는 한국과 조선의 국제적 위상이 높지 않았고 국가정체성도 단단하지 못했다. 남과 북이 아직 국민국가 정체성이 뚜렷이 형성되지 않았던 터라 자기 국호만을 고집하던 냉전시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이나 조선 대신 고려를 제3의 대안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30년이 지나는 2020년 시점에 한국과 조선의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은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고 명실상부한 민족국가, 국민국가로 간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948년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지향하는 정부로 출발했지만 냉전 45년과 탈냉전 30년을 거치면서 국민국가의 실체로 발돋움하였다. 역사해석을 각자 자기 체제 중심으로 내림으로써 한민족과 조선민족은 역사해석을 전혀 달

⁴⁴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pp. 183~184.

리하며 두 역사는 확연히 분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조선은 점점 다른 국가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7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의 구성원들은 한국과 조선의 민족성, 국가성을 충분히 학습하여 의식구조로 볼 때도 국민국가로서의 완연한 면모를 갖추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입지는 대단히 높아졌으며 그 결과 한국과 조선의 세계적 위상이 달라졌다.

이처럼 달라진 통일 환경에서 통일코리아의 국호는 30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탈냉전 30년 동안 한국이 쌓은 국제적 위상과 가치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국호를 버리고 제3의 대안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 구성원의 정서를 고려할 때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남과 북이 한국과 조선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려(高麗)라는 제3의 대안을 채택할 경우 한국이 지난 75년간 쌓아온 국가이미지나 자산은 상실되고 만다. 고종이 대한을 새 국호로 제정했을 당시의 근대화 정신이나, 일제시기 임시정부를 거치며 관통하던 항일독립 의지의 표상으로서 대한이라는 국호, 더욱이 지난 75년 동안 발전시켜온 산업화와 민주화, 국제적 위상 등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대한'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나 대한이 들어가는 국호를 제정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통일국호에는 조선의 가치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조선은 우리 민족사에 오래 동안 사용했던 국호이고 대중친화적인 국호이다. 북한도 조선의 국가의식과 자긍심을 갖는 민족국가적 실체로 발전하였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끌어안으려면,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면 조선이라는 국호도 버려서는 안된다. 조선에는 민족제일주의나 문화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 같은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 조선의 구성원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만 통일국가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조선)의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분단의 아픈 과거까지도 기억하면서 세계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자산을 활용하려면 '대한조선'(大韓朝鮮)이라는 통합국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남북이 협상으로 통일을 하려는 경우, 자기 국호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선을 포기하고 고려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민과 대중의 의식을 고려할 때 조선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한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한국을 포기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대안은 대한과 조선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감안할 때 조선과 한국을 아우르는 ‘대한 조선’이 가장 타당한 국명이라 생각한다.

남과 북의 국호를 아울러 사용하는 이유는 남과 북에서 구축한 각자의 민족정체성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는 데다 국가의 업적과 상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의식화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포용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과도기적 조치이며 통일국가 형성 이후 전체 구성원의 자발적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국호를 대한민국이나 조선 혹은 고려로 개칭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조선으로 남북의 구성원들이 함께 통일국가를 일정 시간 경험한 이후 또 다른 차원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할 시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고려와 같은 제3의 국호사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조선의 국호제안은 잠정적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당장 통일단계에 들어가 국호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이거나 최종형태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 제출: 4월 20일 ■ 심사: 5월 6일 ■ 채택: 5월 22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응천. 『국호로 보는 분단의 역사』. 서울: 동녘, 2019.
- 김학재 외. 『2019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사회과학출판사. 『력사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손영중·박영해·김용간. 『조선통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서울: 박영사, 1997.
- 윤병석. 『대한과 조선의 위상: 격동과 시련의 조선말, 대한제국, 대한민국시대』. 서울: 선인, 2011.
-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 정동준 외. 『북한주민통일의식 2018』.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편. 『통일노력 60년』. 서울: 통일부, 2005.
- 황태연. 『대한민국 국호의 역사적 유래와 민국의 의미』. 서울: 청계, 2016.

2. 논문

- 김명섭. “조선과 한국: 두 지정학적 관념의 연속과 분화.”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 2016.
- 김일성.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 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일본 《이와나미》 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구월산을 피서지로 꾸리며 고려태조왕릉을 개건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박광용. “우리나라 이름에 담긴 역사계승의식-한·조선·고려관.” 『역사비평』. 계간 21호, 1993.
- 이완범. “국호 ‘대한민국’의 명명.” 『황해문화』. 제60호, 2008년.

3. 기타자료

『연합뉴스』.

『朝鮮日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Koryo or Han-Chosun Korea: On the name of a unified Korea

Kim, Phil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ssue of the name of the unified Korea, which is expected to be fierc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to propose the name of the unified nation. North Korea has proposed the name of the unified country with Koryo, while South Korea does not have suggested a specific name in unification proposals. At the beginning of the post-cold war, a third alternative was suggested in the sense that naming either South' Han or North's Chosun should be avoided. For the past 75 years, however, the two Koreas have developed their own system and national identity, and as a result, their consciousness in two Koreas has changed significantly. Above all, considering that Korea's status has rise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give up the heritage of Han Korea in a unified country name. For the reasons, it is suggested to use Han-Chosun Korea, which encompasses Han Korea and Chosun Korea, in order to utilize Han Korea's assets and also to lead Chosun Korea to be integrated to unified nation.

Key Words: Country Name, Unified Country Name, Koryo, Han Korea, Chosun Korea, ROK, DPRK, Han-Chosun Korea, National Identity